

조선총독부청사 철거문제를 통해 본 한국건축계의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Consciousness in Korean Architectural Circles through the Demolition Matter of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박 헤 인* 김 현 섭**
Park, Hye-In Kim, Hyon-Sob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on the change of consciousness in Korean architectural circles through the demolition matter of the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The function of the building has changed several times throughout the Korean modern history owing to its context related to history, location, and architectural & constructional style. In particular, the demolition of this building became a turning point for Korean architectural circles to raise their consciousness. That is to say, this event made them rethink about an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buildings and also about placeness of them in the historical urban context. In addition, they pursued independence of architecture from external factors like the political power, and tried to reach to a contact point between architecture and the public. However, the change of their consciousness still left limitations to be considered, such as that they were not able to subjectively interpret Korean modernity and that no practical movements followed up to complete the demolition debates.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paper argues that the debates concerning the building's demolition were meaningful in itself, particularly because they illustrated social meanings of architecture and raised Korean architectural circles' consciousness in history.

키워드 : 조선총독부청사, 철거, 한국건축, 의식변화

Keywords : Chosun Government General Building, Demolition, Korean Architecture, Change of Consciousness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근대화 이후 한국건축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로부터 출발하였다. 1900년을 전후한 시기의 한국 사회는 서구 신문물의 유입과 일제 식민지배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 한국 사회구성원들은 민족적 관념으로서 기존의 것과 서구적 현대라는 새로운 것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이는 곧 자의식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혼란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근대화시기의 자아와 타자 간의 특수한 경험에 대해 스스로 정의를 내리기도 전에 해방과 분단, 6.25전쟁, 군부정권과 국제화시기 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환경의 변화요인이 가해졌다. 이와 같은 여러 겹의 사회적인 격변은 독특한 한국의 현대 문화를 생성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사회와 문화의 흐름에서 건축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근대화 이후, 한국건축의 발전과정은 사회 정세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통해 성립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이념을 반영하는 건축의 결과물들을 통해 쉽게 판

단할 수 있다. 특히 건물의 용도가 공공적이고, 이에 따라 상징적 의미를 내포할수록 한 사회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이것에 비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총독부청사는 건축과 사회의 상호 관계맺음에 대해 파악하고, 그 가운데 일어난 건축계 내부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의 적절한 사례라 판단된다.

조선총독부청사는 일제 식민지기인 1912년에서 1926년 사이 건립되고, 1995년 해체공사에 착수하여 1997년 완전히 철거되었다. 건립에서 철거에 이르는 70여년의 세월 동안 이 건물은 한국 근현대사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배 당시 조선총독부의 청사였던 이 건물은 해방으로 원래의 목적과 용도를 잃었으며,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 북한군 산하를 차례로 떠돌다가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 마침내 수리되어 정부중앙청사로 사용된다. 중앙청사로의 20여년을 보낸 뒤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축하여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였고, 김영삼 정부에 다시 '조선총독부'의 청사라는 명목으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철거되는 운명을 맞이한다. 이는 총독부청사라는 건축물의 특수한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조선총독부청사가 변용되고 철거되는 과정은 한국사회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와 그 양상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건축학박사

(교신저자, 이메일: archistory@korea.ac.kr)

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조선총독부청사가 건축물로서 가지는 조건과 변용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건축계의 의식변화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선총독부청사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 문헌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물의 양식이나 구법에 집중하여 이를 해석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¹⁾ 그에 비해 이 건물이 지어진 이후 한국사회 내에서 역사와 함께 존립해 온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조선총독부청사가 건립된 것은 일제 식민지기에 한정된 사실이지만, 이후 건물이 가졌던 사회적인 의미와 용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건축적 의의를 가진다. 이는 총독부청사가 고도 서울의 핵심 위치에 자리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대표적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가운데 건축물을 매개로 연결되는 한국건축과 건축계의 의식변화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이전 연구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하나의 건축물이 가지는 특수한 조건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감춰지고 부각되었으며 아울러 이에 대응하는 건축계 내부의 판단과 평가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시기에 생성된 문화와 그 갈래로서의 건축에 관한 논의는 그것의 보존과 활용에 앞서 서구와 일제라는 '타자의 흔적'에 대한 해석과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총독부청사는 비록 철거되었지만 한국건축의 역사적 방향성과 건축물의 가치에 대한 기준 정립의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근대화시기에 가해졌던 타자의 영향력이 지금의 한국건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때, 이것을 논의하고 재고하는 작업은 한국건축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청사가 가진 특수한 조건을 건립에 바탕을 두는 '역사적 조건'과 경복궁 내라는 위치에 따른 '장소적 조건', 물리적 구축체인 건축물로서 가지는 '양식 및 기술적 조건'으로 분류할 것이다. 총독부청사가 가진 사실에 근거한 조건들을 수집하는 것은 증·개축 도면과 철거보고서 등 기존자료에 의거했으며 이를 통해 건물의 배경이 되는 요인과 물리적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총독부청사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의들은 1920년대에서 1997년까지의 신문, 잡지 기사와 학회지 칼

럼 등이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기사의 경우, 같은 내용의 사건이라도 보도에 있어 각 언론 매체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에 반영하였다. 반면 칼럼의 경우에는 글쓴이의 의사가 비교적 확실하게 표현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관점의 파악이 더욱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실과 견해에 대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연구의 객관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조선총독부청사의 배경적 조건

조선총독부청사의 배경적 조건이 되는 건립부터 철거까지 일련의 과정은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시기 지어진 건축물 중에 조선총독부청사만이 가진 특수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1 역사적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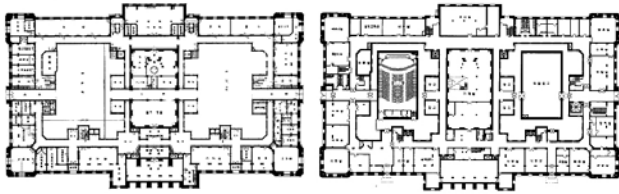
우선 총독부청사의 변화와 그 과정에서 빈번하게 거론된 존재논의의 근거를 건립주체와 관련한 역사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청사는 일제의 강제 한일합방 이후 식민정권의 통치 필요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이다. 새로이 패권을 장악한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력을 가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관청사 시설을 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립주체의 문제는 총독부청사의 역사적 조건 중 가장 주목받는 동시에 이후 한국사회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가장 부각된 시점은 철거논쟁 당시였다. 철거논쟁 이전 총독부청사가 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변용을 거듭할 때, 건립주체에 대한 역사는 주된 논의의 대상이 아니거나 정권이 의도한 건물의 변용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의 사안은 되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박정희 정부가 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 파손된 청사의 내부를 수리하여 정부중앙청사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을 때, 한국사회와 정부는 당시 국가적 모토와 일치하는 '경제적 효율성'에 수리 근거의 주안점을 두었다.²⁾ 그리고 이 과정에서 건립주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 건물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사의 수리공사에 당시 몇몇 건축인들이 기술위원으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³⁾ 건립 역사에 대해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와 건축적 논의는 발견할 수 없다.

1) 조선총독부 청사의 양식에 대한 연구로는: 김석만, 「구 조선총독부청사의 공간과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1997); 강지선, 「조선총독부 청사의 건축양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1994); 이근혜, 오인욱, 「조선총독부청사 실내공간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2007) 등이 있으며, 건축구법에 관해서는 강성원, 「20세기 전반기 양식건축구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2008)에 부분적으로 연구된 바 있다.

2) 당시 국가 제1의 모토가 경제 성장이었던만큼 보수공사의 명목은 비용절감과 효율성이었으며, 실제 공사비의 20%에 해당되는 5억 7천여만원을 미국에게 지원받아 이를 완수하게 된다. 동아일보, 「새로 丹粧된 舊中央廳」, 1961. 9. 28, 3면; 「中央廳 榮辱 56년 建立에서 '博物館계획'까지 <下(하)>」, 1982. 3. 19, 3면, 동시참고.

3) 복구 기술위원회의 명단에는 김순하, 이천승, 장기인, 김중업 등의 건축인이 속해 있었다. 경향신문, 「舊中央廳 廳舍復舊使用」, 1961. 9. 6, 3면.



(a) 건립 당시(1926) (b) 국립중앙박물관 당시(1983)

그림 1. 조선총독부청사의 1층 평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뀌면서 중정에 두 개의 동이 건축되었다.

그러나 뒤이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변용되는 시기를 맞이하였을 때, 이러한 결정에 대한 건축계 내부의 반응이 표출되기 시작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국가의 전시시설 부족을 이유로 20여년간 사용하던 정부청사를 이전하고 건물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앞선 박정희 정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건립주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건물을 변용에 부합하도록 해석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것의 타당성을 “일제식민통치의 본산을 민족박물관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족 자긍심과 주체성을 일깨워주는 산 교육장으로 하는 것”에 두었다.⁴⁾ 박물관으로의 변용 자체가 국가적 차원과 공공의 필요에 적합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역사의 해석에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달리 건축계 내부에서는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대외적 공표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스스로의 입장과 해석에 대한 건축인 각자의 의사표명이 나타난다. 김종업은 중앙청 개보수를 위한 공청회에서 ‘일제단맥설(日帝斷脈說)’을 근거로 청사를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할 것을 주장했고,⁵⁾ 김수근은 신문 칼럼을 통해 중앙청의

박물관 변용에 대한 건축가로서의 지지 견해를 제시한다.⁶⁾ 김종업과 김수근은 이 과정에서 일제에 의한 산물이자 건축물에 대한 사회적 의의를 논하고자 했다. 앞선 김종업의 견해로 대표되는 청사철거 주장의 경우 총독부청사를 일제에 의해 건립된 ‘타자의 것’이자 한국 역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김수근은 총독부청사를 한국사회에 ‘주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국가적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총독부청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분리는 이후에 각각 철거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개된다.

2.2 장소적 조건

건축물의 탄생에 있어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장소적 요인은 동시에 철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선총독부청사의 경우 일제의 식민지 청사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복궁 내라는 장소가 선택되었다. 신청사의 건립에 적합한 대지의 요건으로 충분한 면적과 편리한 교통의 문제가 우선시 되었으며, 더불어 입지 상 식민세력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을 물색했으리라 여겨진다. 당시 경복궁은 고종 폐위 이후 박람회 등의 행사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궁궐로서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여기에 1911년 경복궁이 총독부 산하로 이관되었던 것이 신청사의 부지로 선택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⁷⁾ 하지만 이 부지는 조선 민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수긍하기 힘든 위치였으며, 세끼노 타다시나 곤와 지로 같은 일본 건축인들 역시 이 장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한다.⁸⁾ 비록 그 당시 다른 용도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었지만, 경복궁은 500년 조선왕조의 정궁(正宮)으로서 주권을 피탈당하기 전까지 규모와 형식을 갖춘 민족의 상징물이었던 것이다.⁹⁾ 더구나 일제의 통치시설이 경복궁의 축 상에 위치하여 근정전을 가로막는다는 사실, 그리

4) 경향신문, 「榮辱의 現場을 영원한 民族의敎訓으로」, 1982. 3. 16, 3면.

5) “... 이날 공청회는 김종업씨의 중앙청개수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열을 더했다. 그는 중앙청 건물이 박물관에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청은 원래 사무실용으로 설계되어 방의 높이가 낮을 뿐 아니라 복도 배란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고 지적한 김씨는 중앙청 개수는 신축 못같은 비용이 들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전시공간의 확보가 어렵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중앙청은 일제가 경복궁의 맥을 끊기 위해 지었다고 주장한 김씨는 중앙청의 개수보다는 철거를 통해 옛 경복궁의 모습을 되살려 시민의 공원으로 무료 개방하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교외에 넓은 부지를 확보, 미국스미소니언박물관처럼 종합박물관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世宗路를 民族文化의 거리로 ‘中央廳박물관’ 學界·在野 공청회」, 1982. 7. 13, 3면. 그러나 유사한 시기에 (아마도 공청회 이전,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쓴 것으로 판단되는 「새로운 박물관에 거는 기대」라는 글에서 김종업은 중앙청사의 박물관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다음 저서에 출판됨. 김종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열화당, 1984, pp. 225-7. 동일한 날짜와 사건을 보도한 신문기사에서도 언론사마다 내용에 다소 간 차이를 보이므로 여기서는 철거를 주장한 의견의 한 예가 되었음을 밝힌다. 동아일보, 6면; 경향신문, 3면; 매일경제, 11면; 조선일보, 7면 모두 1982. 7. 13, 동시참고.

6) “중앙청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조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우리를 흥분케 하는 것이며 우선 환영해야겠다.” 김수근, 「『首都의 核』을 文化一色지대로」, 동아일보, 1982. 3. 17, 7면.

7) 岩井長三郎, 『朝鮮と建築』, 朝鮮建築會, 1926. 5.

8) “... 그런데 말이다 신청사가 기(起)하자 신작로가 되자 북부(北部)에 일본(日本) 나막신 소리가 훨씬 자진 것 그것이야 말로 변천 중의 무서운 변천이란 말이다. 남촌(南村)은 발서 일촌(日村)이엇거니와 북촌(北村)도 따라 그들의 촌화(村化)가 되는 중이란 말이다. 아- 무서운 변천(變遷)! 괴로운 변천! 창차 엇지 할고!”朴돌이, 「京城은 一年間 얼마나 變했나?」, 개벽, 제64호, 1925. 12. 1; “... 총독부청사의 가장 최초의 계획이 언제까지나 조선민족에게 일종의 악감정을 남기게 되는 것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 작년 조선에 올 때 야나기 무네요시가 ‘광화문’에 관해 잡지 『개조』에 의견을 발표한 것을 읽었다. 신청사가 생겨서 광화문이 철거되어 건디기 힘든 기분을 쓴 문장이 작년 『개조』의 9월호에 나왔는데, 나도 같은 느낌을 받은 한 사람이다. ... 정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세끼노 박사 등도 위치의 선정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적극주장하고 있다고는 듣지 못했지만, 확실히 저 장소 이외에 대지는 얼마든지 있다는 기분이 든다.” 今和次郎, 『朝鮮と建築』, 朝鮮建築會, 1923. 4.

9) 이영일, 「경복궁의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7, pp. 84-7.

고 청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화문을 없애고 철문을 설치한 것 역시 우리의 민족의식을 자극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총독부청사의 건립 이후, 식민권력의 산물로서의 조선총독부청사와 민족정통성의 장소로서의 경복궁은 이렇게 한 장소를 통해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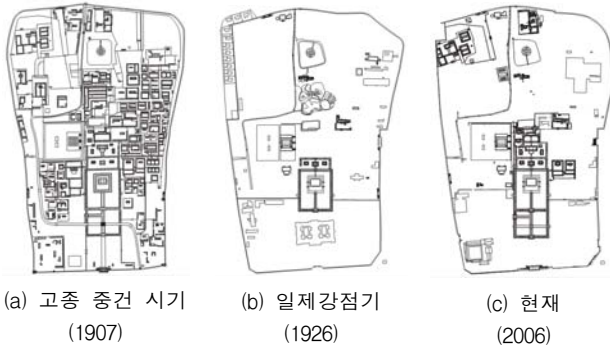


그림 2. 경복궁 영역의 시기별 변화: 1926년경 광화문이 철거되고 근정전 앞에 총독부청사가 건립되었다.

오른쪽의 <표 1>은 1912년 조선총독부청사의 건립지가 결정된 이후 경복궁과 총독부청사의 주요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1960년대에는 문화재보호에 대한 의식이 빠르게 되면서¹⁰⁾ 경복궁이 복원되기 시작하고 문화재로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장소는 점차 문화적 공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장소의 문화적 성격은 조선총독부청사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변용되면서 완전히 굳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의 의미에 대해 건축인들은 사회적 장소성을 고려하는 전문가적 의사를 표명하였다. 일례로 중앙청의 박물관 변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의 건축가 김수근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더욱 중요한 찬성유이가 있다. 우리나라 수도로서 서울의 문화시설의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서울시의 주축 상에 머리와 같은 중심자리에 문화유산이 담겨진 박물관이 그 문화의 상징적 역할을 하여 주연 배우 격이 되는 셈이다.”¹¹⁾

김수근은 총독부청사를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로 보아 그가 건축물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기능과 도시 차원의 장소성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건축인의 생각은 이후에 이루어진 철거논의를 통해 더욱 발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2.3 양식 및 기술적 조건

조선총독부의 신청사는 기존 남산자락에 위치해있던

10)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시작했다. 그리하여 1961년 7월에는 고적과 사찰 등을 향연장으로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1962년 1월에는 문화재보호법이 반포되는 등 문화재 관련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문화재청, 『경복궁 변천과정 및 지형분석 학술조사 연구용역 상』, 2007, pp. 99-105.

11) 김수근, 「『首都의 核』을 文化一色지대로」, 동아일보, 1982. 3. 17, 7면.

표 1. 1900년대 조선총독부청사와 경복궁의 주요 변화

일시	변화내용
1912.	조선총독부청사 부지를 경복궁 안으로 결정
1915. 9. 11. ~ 10. 31.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개최
1916. 7. 10.	조선총독부청사 신축공사 기공식
1918.	강녕전, 교대전 등 내전 전각 훼손
1925. 7. ~ 1926. 8.	광화문 이진공사
1926. 10. 1.	조선총독부 청사 낙성식
1928. 5. 28.	조선총독부 청사 정원조경 완료, 총독부청사로 사용 시작
1945. 8. 15.	광복 후 미군정청사로 사용, 중앙청으로 명명
1946.	경복궁 내 미군 간이병사 22동 건립
1948. 11. ~ 1950. 10.	대한민국정부 수립, 국회의사당으로 사용
1954. 8.	경복궁을 일반인에게 부분 공개
1961. 9.	6. 25 전쟁으로 파괴된 부분 복구
1962. 11. 22.	중앙청 개칭식
1968.	광화문 복원
1975.	영추문 복원 및 동정문 건립
1990~ 1995.	강녕전, 교대전 등 침전영역 복원
1994~ 1999.	자선당, 비현각 등 동궁영역 복원
1995. 8. 15.	구 조선총독부청사 철거 작업 시작
1997. 2. 28.	구 조선총독부청사 철거 완료

지상 2층 규모 통감부청사의 시설을 보완하는 동시에, 관청사로서의 외관을 만족시켜야 했다. 그리하여 총독부청사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축면적 7,323.4㎡에 르네상스 리바이벌의 역사주의양식으로 건립되었다.¹²⁾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일본인들 역시 건축 기술과 설계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했다. 대규모 공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조선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철근콘크리트 구법을 사용하였고,¹³⁾ 양식과 관련한 건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독일건축가 게오르그 데 라란테를 전문가로 초빙하였다. 독일 제실의 건축기사였던 데 라란테(1872~1914)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림 3. 통감부청사(1907) 그림 4. 조선총독부청사(1926)

12) 총독부청사의 양식에 관해 김석만은 “총독부청사의 배치, 평면, 입면, 단면들의 구성은 출입구와 중정 및 중앙부분의 돔과 양쪽 끝부분의 탑들이 중심이 되어 명확한 구조체계로서 축과 함께 서로 대칭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엄격한 질서 속에서 통일감과 균형미를 중시”한다고 언급하였다. 김석만, 앞의 글. 또한 당시 모더니즘적 건축양식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청사가 이러한 양식으로 건립된 이유는 관청이라는 건물의 용도에 서구식 고전양식이 적합하다는 일제의 관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관청은 어떠한 간에 관청다운 용태로서 진면목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진부(陳腐)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그 기초를 클래식에 둔 양식으로 외관이 계획되었다.” 岩井長三郎, 『朝鮮と建築』, 朝鮮建築會, 1926. 5.

조선총독부 설계 시 서울 소공동의 조선호텔(1913-14)의 디자인 역시 담당하였다. 그는 1914년 급사하기 전 총독부청사의 대략적인 설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작업은 일본인 건축가 노무라 이치로에게 맡겨졌다.¹⁴⁾



그림 5. 데 라란데의 조선총독부청사 첫 계획안 (1912-14)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해방 이후 이를 쉽게 철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거대하고 육중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 후 같은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두 배의 예산을 요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 당시 총독부청사를 중앙청으로 변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에도 이러한 철거 비용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¹⁵⁾

근대화시기의 변화가 이후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총독부청사의 양식과 구법은 충분한 의의를 가질 수 있었으나,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는 등한시되었다. 총독부 청사의 건립에 당시 영선과 기수로 있던 박길룡 등 여섯 명의 한국 건축가들이 참여했다는 것¹⁶⁾ 역시 마찬가지로 주목 받지

못한 사실이었다. 식민지시기 일제에 의해 받아들인 기술과 근대문화이라는 것은 직시해서는 안 될 사항이었으며, 이로 인해 청사가 지닌 건축물로서의 가치보다 부정적인 역사의 면만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3.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와 건축인의 의식변화

조선총독부청사는 한국건축에 사회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었다. 앞서 언급한 배경적 조건들은 한국사회 내에서 이 건축물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건물의 철거 당시 정점에 달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건축계의 의식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3.1 역사의 매개체로서의 건축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 논쟁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는 청사의 건립배경에 관한 식민지사 문제였다. 철거 당시, 조선총독부청사의 건립주체가 일제 식민권력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근대화의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완벽히 타자에 의한 침해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총독부청사는 식민지사의 일부분이자 지위버려야 할 역사의 흔적이 되었다. 그러나 청사 철거논의가 일반인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의 이분법적 판단을 요구하였다면, 건축인들은 총독부청사라는 건축물을 통해 ‘역사의 매개체로서의 건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조선총독부청사의 역사는 해방 전과 후로 분류할 수 있다. 즉, 해방 전은 일제식민지기로, 해방 후에는 한국 현대사로 해석된다. 해방 이전의 역사에 주목하여 논의를 이끌어 간 쪽은 철거에 찬성하는 건축인들이었다. 이들은 건축물 자체의 독립적 가치보다 한국사 내에서 건축물이 가지는 역사성에 우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정철은 철거 찬성의 가장 첫 번째 근거로 “일제시대인의 잔재를 후세에게 산증거로 남기므로 쓰러린 역사를 돌이켜 보는 교육적 효과보다는 식민문화를 남김으로 잃는 점이 많다”는 것을 꼽고 있다.¹⁷⁾ 이것은 그가 총독부청의 핵심 성격을 일제의 잔재, 즉 식민사의 표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찬성론자들 역시 이와 비슷한 논지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 현대사가 담긴 공간으로서 해방 이후의 역사성을 강조한 것은 철거에 반대하는 이들이었다. 일제 식민지기와 마찬가지로 현대사 역시 동등한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총독부청사는 한국의 주체적 역사가 담긴 건물이기도 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철거 논쟁 당시 무엇보다도 건축인들의 판단에 혼란을 준 것은 당시의 한국건축에서도 여전히 식민지 근대화시기에 받아들인 신문물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일제 식민지기에 건립되었지만 조선총독부청사를 한국건축 역사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었

13) 총독부청사는 처음에는 조적조로 계획되었으나 대지 지질의 조건, 채광, 벽체의 두께와 하중 등을 이유로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변경된다. 건물의 기초공사에서 낙엽송 말뚝 약 9000여개를 사용하여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기초와 골격에는 모두 칸바(Kahn Bar)라고 하는 특수한 철근을 이용한 공법이 사용되었다. 조선총독부청사는 최초의 철근콘크리트 관청사이자, 육중한 조적식 구조에서 대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골격 구조로 넘어간 직후의 건물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후 1930년대에 들어서 시멘트 재료수급이 용이해지면서 관청건물이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지게 된다. 강성원, 「20세기 전반기 양식건축구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8.

14) 문화체육부, 『구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 보고서』, 1997, pp. 34-7.

15) “조선총독부청사를 복구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로서 ①동양굴지의 서구식 근대건물이며 ②침수붕괴로 인한 피해손실이 매년 삼천만원에 달한다 ③동청사와 동등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빨럭’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약 칠십억원이 드는데 비해 이를 복구 완성하면 건물가치는 약 삼백억원으로 평가되고 수리비는 총평가액의 일할내외로 완전복구 시킬 수 있으며 ④이를 철거하려면 칠억원이 소요된다 ⑤수리사용으로 국민부담이 경감하고 분산되어 있는 중앙기구를 한 청사 내에 집중 수용할 수 있다.” 경향신문, 「舊中央廳 廳舍復舊使用」, 1961. 9. 6, 3면. 유사한 내용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동아일보, 「舊中央廳舍 수리」, 1961. 9. 7, 3면; 「새로 丹粧(단장)된 舊中央廳」, 1961. 9. 28, 3면.

16) 일본 건축가들이 받아들인 서구식 건축 방법을 당시 청사 건축에 참여했던 조선인 건축가들 역시 습득했으리라 판단된다. 주도적 지위는 아니었지만 영선과 기수(技手)였던 박길룡과 고원(雇員)이었던 이규상, 김득린, 손형순, 이훈우, 박동린 등이 건물 축조에 참여했다. 낯선 건축 과정에서 접하게 된 서구식 공법은 한국 건축기술자들이 접한 신문물 그 자체였을 것이다. 조선총독부, 김동현 역, 「신영사무 및 직원명단」, 朝鮮總督府廳舍新營

誌, 국립중앙박물관, 1995.

17) 김정철, 「舊 중앙청사 이전, 건축인에게 듣는다」, 『공간』, 1990. 12, 통권 280호, p. 46.

다. 민족 내부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건축인들은, 근대화 시기에 지어진 중요건물이기도 한 총독부청사에 대해 가치의 판단을 내려야했다. 청사의 존폐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건축인들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¹⁸⁾ 당시의 혼란스러움을 대변해준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사실은 조선총독부청사의 존폐 논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문제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건축인들이 이 건물뿐만 아니라 식민역사와 연계되는 모든 건축물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3.2 건축, 그리고 도시의 장소성

조선총독부청사 철거의 배경에는 경복궁 복원문제가 있다. 총독부청사의 존폐가 논의된 것 역시 경복궁의 복원 기준 시점을 정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경복궁의 복원, 총독부청사의 변용과 철거 행위에 정치권력의 이념이 포함되어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둘러싼 건축계의 논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건축인들은 한국사회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조선총독부청사 및 경복궁 영역이 가지는 장소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였다. 조선총독부청사가 있던 자리는 서울이라는 도시 내에서 일제시에는 식민권력의 장소, 그 이후 80년대 초까지 국가 행정의 중심지, 그리고 철거 전까지는 문화의 장소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건축가 장세양은 국립중앙박물관 당시 그 일대가 가졌던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하여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20세기 말이라는 시점과 문화적 중심으로서의 장소성을 유지시켜야한다는 것이다. ... 서울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박물관을 만들으로써 문화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면 그 역사적 장소적 의미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위와 같은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인들은 총독부를 철거하고 경복궁을 복원하였을 때 공간이 가지게 되는 장소적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덕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이 건물의 위치는 이미 현대화된 大서울의 골격형성의 基點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자리에 어울리는 크기와 위용을 갖춘 건물이다. ... 이곳은 국가의 행정·문화·교육·군사·경제 등의 기본 중추신경계의 건축이 주축을 이루도록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⁰⁾

그는 총독부청사의 위치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건축인들은 총독부청사를 철거할 경우 건물이 파괴되고, 이를 보존할 경우에는 경복궁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양립 불가능한 사실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총독부청사의 ‘이전(移轉)’이라는 방법도 거론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박길룡은 “경복궁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전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 원래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²¹⁾ 그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경복궁이 가지는 가치와 총독부청사 건물을 함께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 “원래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총독부청사의 원래의 장소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인들이 강조한 장소성의 측면에서 볼 때, 총독부청사의 이전은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다. 김원은 “중앙청의 다른 곳으로의 이전건립은 어렵거나 무의미할 것이다”라며 장소성을 고려한 이전의 무의미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²²⁾ 김원의 의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건축인들은 건물이 기존의 대지가 가진 장소성이라는 조건과 결합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총독부청사를 해체 후 재조립하여 다른 장소에 위치시키는 것은 건물이 가지는 의미를 상실한 채 외피만을 옮기는 행위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건축인들은 ‘장소성’을 건축물이 가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겼다. 장소성에 대한 기본적 생각은 총독부청사의 존폐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인들은 이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으려 했다. 건축인들의 청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은 문화 공간으로서의 장소적 조건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또한 도시 내에서 그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3.3. 한국사회의 건축과 외부 요인

철거가 시작된 이후 강혁은 당시 철거작업을 지켜보는 건축인의 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일부 인사들의 속은 편안하지 않다. 한 건물의 존폐가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과 연결된다는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 구 총독부청사의 존폐논의에는 실상 건축물의 의미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개입되어 있다. 한 건물이 담고 있는 의미나 상징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한 건물이 지니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이미지는 영구불변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²³⁾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조선총독부청사는 199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철거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강혁이 언급한 바와 같이 총독부청사의 존폐 논의는 한

18) 1990년 12월 공간지에 실린 舊 총독부청사 철거에 대한 건축인들의 입장은 반대 1인(김정동), 찬성 3인(김정철, 류춘수, 방철린), 중립 4인(김원, 민현식, 박길룡, 신영훈)으로 철거와 보존의 중간 의사를 표하는 건축가들이 여덟명 중 절반을 차지한다. 앞의 글.

19) 장세양, 「歷史와 文化장소 의미 살려야 경복궁 복원문제 함께 고려를」, 동아일보, 1990. 12. 6, 17면.

20) 이정덕, 「中央박물관 철거 再考해야」, 한국일보, 1991. 6. 4.

21) 박길룡, 「舊 중앙청사 이전, 건축인에게 듣는다」, 『공간』, 1990. 12, 통권 280호, p. 46.

22) 김원, 「중앙청 철거문제」, 『우리시대 建築 이야기』, 열화당, pp. 149-156.

23) 강혁, 「광복 50주년: 근대화와 건축의 근대사」,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1995. 9, p. 23.

국사회에서 건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연관된 문제였으며, 이것은 곧 건축과 외부 요인으로서 한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진다. 청사의 철거문제에 있어 건축의 외부적 요인이라 함은 정부권력과 비건축인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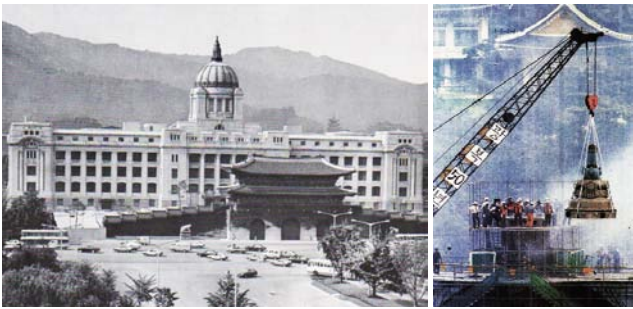


그림 6. 구 조선총독부청사와 광화문(1986) 그림 7. 동해대(1995)

이전까지 한국건축은 사회의 주된 통치 세력으로서 정부권력과 긴밀한 결탁관계를 맺어왔다. 정부 주도하에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고 지어진 대형 건축물들은 대부분 민족 전통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담아 권위적 외관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한국건축의 문제가 건축가의 창조성에 주로 관련된 것이었다면, 총독부청사의 철거는 건축물의 파괴 역시 정치적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청사의 철거장면을 지켜 본 건축인들은 건물의 덩이 잘려져 나가는 장면, 그리고 건축물이 마치 역사의 죄인처럼 취급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건축의 관계의 이면을 보게 된다. 그것은 일제식민지 근대화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인해 일제에 의한 근대건축물의 경우 그 의미가 쉽게 곡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후 한국건축계는 건축의 역사에 대한 주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자각하게 된다.

정부의 입장에서 총독부청사의 철거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를 찬성하는 대중의 힘이 필요했음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건축계 역시 철거 논쟁의 과정에서 한국사회구성원들의 반응에 주목하였다. 이는 청사의 철거 논의가 건축물이라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반인들은 그 건축물 자체보다 청사 건립주체와 관련한 역사적 조건을 가치 판단의 우위에 두었고, 이로 인해 철거에 찬성하는 입장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²⁴⁾ 일반인들은 건축물 자체의 독립적 가치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고, 동시에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건축계 내부의 주체적 판단과 해석 또한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1994.10.21)와 삼풍백화점 붕괴(1995.6.29) 사건이 미친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증폭되었으며, 건축계 역시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²⁵⁾

4. 철거를 통한 의식변화의 한계와 의의

지금까지 살펴 본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문제와 연관된 한국건축계의 의식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건축인들은 식민지기에 건립된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총독부청사의 위치와 관련하여 그것이 가지는 도시 내의 문화적 장소성에 대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또한 건축의 외부 요인인 국가권력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벗어나 건축의 자립을 추구했으며 비건축인들과 건축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건축계의 의식변화는 위와 같은 의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건축의 역사 해석이 ‘한국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청사의 역사적 의의를 해방을 기점으로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를 벗어나, 건축의 역사 그 자체로 보려는 태도가 부족하였다. 일제 식민지기는 한국사에 있어 타민족에게 지배받은 치욕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된 시대이기도 하다. 자력 혹은 타자에 의한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이 시기 한국사회가 겪은 변화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건축은 물리적 형태를 기본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드러내기 마련이며 이것은 근대시기에 생성된 건축물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건축은 근대화시기 신문물의 수혜자로서 식민지기 역사에 대해 더욱 주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서구의 양식을 일본이 받아들여 그들의 방식으로 풀이하고, 이를 다시 한국에 전이시킨 과정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청사의 건립 시점이 포함되는 한국사회와 건축의 근대화 시기는 한국의 근대성(modernity) 및 정체성(identity) 논의와도 연결된다. 둘째는 한국사회라는 외부 요인과 건축 간의 관계모색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철거 당시 건축계의 논의에서 이루어진 것은 건축과 정부권력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사회에 대한 건축의 책임의식이었고, 문화에 대한 사용자이자 판단자로서 일반인들에게 건축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 건축계의 논의는 이러한 문제의 자각에 그치고 말았으며 현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행위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국가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철거 사업에서는 식민지기의 부분적 역사가 강조되었으며, 건축인들의 다양한 견해 또한 반영되지 못하였다. 총독부청사의 철거 결정과 시행은 대외적인 분위기와 정치적 의도로 인해 건축물 자체의 가치는 배제

24) 1991년 서울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한 문화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완전 철거나 이전을 지지하였고, 1993년 8월 9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여론조사에서는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를 차지하였다. 동아일보, 1991. 6. 14, 8면; 1993. 8. 10, 29면.

25) 예를 들어 “사실 우리는 발 빠른 현대화 과정에서 외형에 있어서는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하지만 그 성장이 과연 충실한 기반 위에서 단계적으로 이룩되었는지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 같은 건축의 사회적 책임 의식에 대한 의견이 그 시기 다수 제기되었다. 김덕재, 「삼풍백화점 참사의 교훈」, 건축, 대한건축학회, 1997. 6.

된 채 단기간에 진행된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 논의는 한국건축계에 건축의 주체성 확립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즉, 이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한 물리적 결과물로서의 건축에 대한 해석의 계기와 더불어 건축의 주체성을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 논의와 관련한 건축계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90년대 한국건축계에 있었던 여러 변화의 징후²⁶⁾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개항 이후 조선은 스스로 생성해 발전시켜온 것이 아닌 서구 산업화에 의한 타자의 문물을 상당 부분 일본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조선총독부청사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이후, 권력 강화와 통치의 목적을 위해 지어진 식민지사의 유산이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일제라는 지배자가 사라진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한국 현대사에 남아, 시대별 정권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과 용도로 이용된다. 그러나 해방 후 식민권력이 물러나고 6.25전쟁 시 북한군에 의해 내부가 소실되던 때 ‘조선총독부청사’로서 건물의 기능은 사라진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정부가 10여년 만에 이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중앙청사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조선총독부청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이 건물을 정부청사로 사용한 데에는 국가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건물을 중앙청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된 것도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전두환 정부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증·개축은 청사가 맞이한 또 다른 변화였다. 그러나 이후 노태우 정권의 문화재 관리 사업으로 경복궁 복원이 대두되면서 청사의 존폐 논의가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그 전에도 반일감정에 따른 총독부청사 철거론이 간간히 있었으나,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거래의 얼을 되살린다는 기치아래 1997년 총독부청사는 완전히 철거되었다. 이처럼 조선총독부청사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총독부청사의 철거, 이전, 보존의 논쟁은 한국 건축계 의식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를 통해 역사와 장소에 대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졌고, 한국 사회 내에서 정권과 비건축인에 대한 관계를 모색하게 된다. 반면 총독부청사 철거 논의를 배경으로 한 한국 건축계의 의식변화는 이러한 의의와 더불어 한계점 또한 지닌다. 우

선 철거논쟁 당시에는 일제식민지기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한국의 근대화와 이것의 영향으로 인한 건축 분야의 변화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부족하였다. 화신백화점(1937년 준공~1988년 철거)과 명동 국립극장(1936년 준공)의 존폐에 관한 논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근대시기와 그 건축물에 대한 논의만큼 활발하지는 않았다. 또한 철거논쟁 당시 건축 외의 사회적 요인들과 공유점을 찾기 위한 시도 역시 건축가들 사이의 논의로만 끝났을 뿐 실질적 해결책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그라들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청사’라는 건축물은 한국 건축사에 있어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이 건물은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겪어왔다. 그리고 철거 논의에서는 일제라는 타자에 의한 근대화의 산물에 대한, 그리고 경복궁 복원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식민지 경험의 특수한 배경으로 인한 역사적 결과물에 대해 한국건축이 가져야 할 태도의 문제 반영한다. 이러한 타자의 흔적에 대한 판단은 근대건축물이라는 물리적 실체, 나아가 서구의 건축 방식을 받아들여 현재에 이른 한국건축의 주체성 문제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강지선, 「조선총독부청사의 건축 양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94.
2. 김석만, 「구 조선총독부청사의 공간과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7. 4, 통권 102호.
3. 이영일, 「경복궁의 공간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2007.
4. 강성원, 「20세기 전반기 양식건축구법의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8.
5. 조선총독부, 김동현 역, 『朝鮮總督府廳舍新營誌』, 국립중앙박물관, 1995.
6. 문화체육부, 『구 조선총독부 건물 실측 및 철거 보고서 上, 下』, 1997.
7. 문화재청, 『경복궁 변천과정 및 지형분석 학술조사 연구용역 上, 下』, 2007.
8. 이용범, 『건축은 없다?』, 간향미디어, 1995.
9. 안창모, 『한국 현대 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1998.
10.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11. 김경일,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백산서당, 2003.
12. 박길룡, 『한국현대건축의 유전자』, 공간사, 2005.
13. 김백영, 『지배와 공간』, 문학과 지성사, 2009.
14.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923년 4월호, 1926년 5월호.
15. 공간사, 『공간』, 1966-1997년.
16.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각각 1960-1995년), 조선일보 (창간호-1997년).

<그림 출처>

- 문화체육부 (1997): 1, 4, 5/ 문화재청 (2007): 2/ 동아일보 (1995. 8. 16): 7/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kia.or.kr/>): 3/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가』 (1986. 7-8)

(接受: 2010. 8. 2)

26) 80년대 중반 이후 건축계의 변화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건축역사학회(1991)가 창립되고 ‘청년건축협의회(1987)’, ‘4.3그룹(1990)’, ‘민족건축협의회(1992)’, ‘건미준(1993)’ 등의 모임이 생겨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 안창모, 『한국현대건축 50년』, 도서출판 재원, 1998, pp. 156-166.